



주간 통일정세

2012-3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대규모 청년절경축행사 실황 중계(8/27, 연합뉴스)

- 북한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을 기념하는 청년절(8월28일)을 맞아 27일 오후 평양체육관에서 대규모 경축행사를 열고 실황을 중계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청년들에게 보낸 축하문에서 "청년절 경축행사는 당의 청년중시 사상에 의해 승승장구해 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며 당을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해 곧바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충정과 역센 기상을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이라고 말함.
- 이어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은 적들의 침략책동에서 쓰고 있는 기본수법이며 주 대상은 청년"이라며 "청년들은 우리식 우리 것에 대한 애착과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한 미제와 반동들의 무분별한 침략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또다시 미국과 남한을 비난하기도 함.

● 北김영남, 비동맹회의 참석차 이란 항발(8/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8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8월30일~31일)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이날 "김영남 위원장이 테헤란에서 진행되는 제16차 뿔럭불가담(비동맹) 국가수뇌자(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이란을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연일 동부전선 군부대 시찰(8/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동부전선에 있는 제313대연합부대 지휘부와 산하 군부대인민군 및 제318부대 시찰을 포함하여 연일 전선지역의 군부대를 방문해 군의 전투태세를 점검하며 강경한 대남 비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제318부대의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 군사연구실, 군인회관 등을 둘러봤고 지휘부 청사에서 전투임무수행정형을 보고받은 뒤 작전계획을 검토하며, "최근 역도무리들의 전쟁 광증 때문에 조국의 최전연(최전방)지대 전방의 공기가 좋지 않다"며 "이제 적과 맞붙는 기회가 오면 부대의 무쇠 주먹으로 괴뢰악당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다시는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번 제대로 맛을 보여주자"고 말했다고 전함.

● **北김정은 부부, 청년대표와 음악회 관람(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30일 평양 인민극장에서 청년절(8월28일) 경축행사 대표들과 은하수음악회 '사랑하라 어머니 조국일'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北김정은, 경제시찰 재개...식당 방문(종합)(9/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창전거리에서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을 돌아봤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은 해맞이식당 내 슈퍼마켓, 대중식사실, 개별식사실, 커피점, 육류 및 수산물 상점을 둘러보고 시공정형, 상품진열 상태, 봉사(서비스) 계획, 요리의 가짓수와 질 등을 점검함.
- 그는 슈퍼마켓을 방문해 "슈퍼마켓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면 식료품 가격을 바로 정하고 영업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간이매대에서는 '강냉이튀기(옥수수 빵튀기)'의 냄새가 구수하다며 맛을 보기도 했고 커피점에서는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으며 해맞이식당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면서 '100점, 만점'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이번엔 '경제시찰' 쟁결음(9/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제1위원장이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을 돌아보며 "대동강타일공장의 일꾼과 종업원들이 창전거리를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각종 타일과 기와를 생산보장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2단계 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해 건재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치하함.
- 김 제1위원장의 공장 방문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노동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 김양건 당비서(대남 담당), 김영일 당비서(국제 담당),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한광복 내각 부총리,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1부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 리룡하 당 1부부장, 박태성(신원 미상), 김병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장수길 당 부부장, 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또 이날 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우리의 경찰에 해당) 여성취주악단의 연주회를 관람함.
-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김 제1위원장은 "취주악 연주와 함께 여성취주악단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인 울동을 배합한 것이 좋다"고 평가하고 "사람들 속에서 여성취주악단에 대한 인기가 높은 만큼 울동형상을 더 다양하면서도 볼 맛이 있게 창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김 제1위원장 부부의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김기



남, 김양건, 김영일, 문경덕, 한광복, 한광상, 김경옥, 리룡하, 박태성, 김병호, 마원춘 등이 수행함.

● 北 리설주, 이번엔 바지 입고 남편 동행(9/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일 오후 5시께 김 제1위원장의 평양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김 제1위원장과 리설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내보냄.
- 이 공장 방문 사진들을 보면 검은색 '일자바지'를 입고 앞이 트인 흰색 구두를 신은 리설주가 남편과 함께 공장 구내를 활보했으며 일부 사진에서는 리설주가 팔을 휘저으며 남편과 나란히 걸어감.



■ 김정은동향

- 8/28, 김정은 당 제1비서, 제313대연합부대 지휘부와 제894군부대 시찰(8.28,중통·중방)
 - 부대 시찰 일시 및 수행원은 未 언급
- 8/29, 김정은 당 제1비서, 전선 동부에 위치한 제318군부대 시찰(8.29,중통)
 - 김명국(대장), 황병서(당 부부장) 동행
- 8/30, 김정은 당 제1비서, 동부전선시찰 종료 귀환中 부인 리설주와 인민무력부에 건립된(8.24) 김일성·김정일父子 동상 방문 참배 및 동상제작·건립 일꾼들에게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8.30,중통·중방·평방)
 - 리설주, 8.30 청년절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은하수음악회 '사랑하라 어머니조국을' 관람(8.30,중통)
 -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현철해,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 등 동행
- 8/30, 김정은(당 제1비서)·리설주, 8.30 청년절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8.30,중통)
 -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현철해, 전용남(청년동맹 중앙위 위원장) 등 동행
- 8/30, 김정은 당 제1비서, 청년절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사진 촬영(8.30,중통)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백세봉, 한광상, 한광복, 박태성, 김병호, 마원춘 동행
- 9/1, 김정은 당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 시찰(9.1,중통)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백세봉, 한광상, 김경옥, 박태성, 김병호 동행
- 9/1, 김정은 당 제1비서, 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러진 전자도서관 시찰(9.1,중통)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백세봉, 한광상, 한광복, 박태성, 김병호, 마원춘 동행
- 9/1, 김정은 당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 시찰(9.1,중통)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백세봉, 한광상, 김경옥, 박태성, 김병호 동행
- 9/2, 김정은 당 제1비서,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9.2,중통·중·평방)
 -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문경덕, 한광복, 한광상, 김경옥, 리룡하, 박태성, 김병호, 장수길, 마원춘 등 동행
- 9/2, 김정은 당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연주회지도(9.2,중통·중·평방)
 -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 수행 인물중 장수길 제외
 - 만수대창작사 일꾼-창작가 등에게 '김정은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 모임, 9.1 김기남 등 참가下 진행(9.2,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청년절 경축대회(실황중계), 8.27 평양체육관에서 진행(8.27,중통·중방·평방)
 - 최영림, 최룡해(김정은 축하문 대독), 현영철,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사회) 등 참가



나. 경제

● 北, 나선에 대규모 '국제무역센터' 건립(8/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에 상점과 식당, 호텔 등이 포함된 건물 16개동 규모의 대형 국제무역센터(국제상업무역중심)가 건설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세계의 많은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관심 속에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나선국제상업무역중심 건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건설 추진 현황을 상세히 소개함.
- 통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한 나선백호무역회사와 중국 친황다오(秦皇島)금지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합작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4만여㎡로 연건평은 8만8천㎡임.

● 北 금융개혁 조짐...금융통제·화폐유통 강조(8/28, 연합뉴스; 조선신보; 경제연구)

- 북한 관련 매체에 국가의 금융분야 통제, 화폐 유통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한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5일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1~22일)에서 발표된 김일성종합대 경제학부 김은철 교원(교수)의 논문은 '현시기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심각성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독자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실현해나감에 금융분야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해나감으로써 더 안정된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의 경제잡지 '경제연구' 최신호(7월30일 발행)는 '주민의 지불능력 있는 수요에 따르는 상품적 보장과 화폐 유통 공고화'라는 논문을 통해 "현금 유통의 공고성은 주민의 지불능력 있는 수요에 따른 소비상품량을 보장해 주민들의 수중에서 유통하는 현금을 제때에 은행기관에 집중시켜야 실현된다"고 강조하며, 이어 "국가은행으로의 화폐자금 집중은 경제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화폐자금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이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함.

● '고공행진' 北 쌀값 또 수직상승(8/28, 데일리NK)

- 수개월째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이달 들어서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28일 보도함.
- 이날 현재 양강도 해산의 장마당 쌀값이 1kg당 이달초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랐고, 함경북도 무산은 6천원, 온성 6천500원 등을 기록했으며, 원화의 위안화 대비 환율은 이날 오전 1천100원까지 상승해 처음으로 1천원을 돌파했다고 전함.



- **北, 나선서 외국인에 주택 판매 (8/31, 조선신보)**
 - 북한이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나선경제특구에서 외국인에게도 부동산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31일 전함.
 -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찾아라'는 나선발 기사에서 내년 10월까지 국제상업무역중심(국제무역센터)을 비롯한 건물들이 완공된다며 "살림집(주택)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된다고 한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정전에 가옥 파손...피해속출(8/28, 조선중앙통신)**
 - 제15호 태풍 '블라벤'이 28일 오후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한에 상륙하면서 송전선이 끊어져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가 하면 가옥이 파손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9시께 "서부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황해남도과 황해북도 등에서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황해남도에서 450여 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졌고 해주시에서는 송전선이 파괴돼 공장, 기업소들과 가옥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끊겼으며, 예성강 6호 발전소에서는 200m²에 달하는 지붕이 강풍에 날아갔고 도내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전함.

- **北피자가게서 美상징 '코카콜라' 판매(8/31, 연합뉴스)**
 - 미국식 자본주의의 상징인 '코카콜라'가 북한에서도 유통되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 외국인이 지난 3월 중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면, 평양에 있는 이탈리아 전문 요리점인 '해운이탈리아특산물식당'에서 캔으로 된 코카콜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에서 코카콜라가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임.

- **백두산 화산에 부쩍 관심쏠는 北(9/2, 연합뉴스)**
 - 한 대북소식통은 2일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국의 대학, 비정부기구와 백두산 분화와 관련된 탐사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과 영국의 전문가들은 2년 동안 백두산 주변에 지진계를 설치한 뒤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움직임과 화산 분화의 전조 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대외정세

가. 일반

- **북-러 경협, 의료 분야로 확대(8/27, 연합뉴스)**
 - 올해 들어 정치·경제분야 교류를 부쩍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의료분야까지 교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27일 코트라(KOTRA)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 메디컬 센터의 올렉 박 센터장이 최근 코트라 측과의 면담에서 평양에서 열리는 의료포럼에 참가해 북한 의료당국과 의료진 교류를 협의한다는 계획을 설명함.
- **日 민간인 4명, 유골수습 위해 방북(종합)(8/27, 연합뉴스)**
 - 일본 민간인 4명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 27일 북한으로 출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들은 열흘간의 방북 기간 일본인 묘지나 일본인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돌아볼 예정이다.
- **北中공동관리 수풍댐 홍수방지시설 완공(8/29,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의 공유 하천인 압록강에 세워진 수풍발전소(수풍댐)의 홍수방지시설 공사가 최근 완료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중국에서 열리는 수풍발전소 홍수방지시설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해 북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의 북한 측 이사장인 김용철 전력공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 **국제적십자사, 北수재민 4만명 지원(8/30,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6개 도 23개 군의 9천 280가구, 3만8천912명의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분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전함.
 - IFRC는 '북한 수해복구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적십자회 자원봉사자 4천여 명과 함께 북한 내에 미리 비치해 둔 긴급 구호물품과 이달 초 집행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31만 달러를 활용해 비닐 박막, 이불, 물통, 수질정화제, 위생용품 등을 수재민에게 제공하고 응급처치와 위생교육을 했다고 밝힘.
- **北日, 국장급 교섭·납치문제포함 합의(종합3보)(8/31,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4년 만의 첫 정부 간 회담을 31일 마무리하고 향후 국장급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전함.
 -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성일 북한 외무성 일본과장과 오노 게



이치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장은 이날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 사흘째 협의를 하고 조만간 베이징에서 국장급 본회담을 열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음.

● **北김영남, 몽골·캄보디아 정상들과 회동(8/31, 조선중앙통신)**

- 이란에서 열린 제16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차하야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요웨리 무세 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북한에서 큰 수해가 난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하고 북한과 몽골의 친선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함.

● **말聯-北, 협력 확대·강화 합의(9/1, 신화통신)**

-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대 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말레이시아 외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1일 보도함.
-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전날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모하메드 라드지 압둘 라흐만 사무국장이 북한 정부 측과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란서 '환대'받는 北 김영남(9/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영남 위원장이 이란 수뇌부들과 면담을 한 소식,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 소식, 김 위원장이 이란 대통령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한 소식 등 관련 보도를 7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영남은 1일 테헤란의 대통령궁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모하메드 레자 라히미 제1부통령 등과 회담을 했으며 국회청사에서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을 만남.

나. 6자회담(북핵)

● **IAEA "북한, 경수로 건설 상당한 진전"(종합)(8/31, 국제원자력기구(IAEA))**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진행해온 경수로 건설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상당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거뒀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1일 밝힘.
- "경수로 건물에 돔이 설치됐다"며 그 내부에는 기기설비들이 장착됐는지 모르며 냉각시스템은 이미 갖춘 상태라며 IAEA가 30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 같이 평가함.
- IAEA는 우라늄 농축 활동과 경수로 건설에 관한 북한의 발표들은 "계속해서 깊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함.



- **北 "美적대정책 지속되면 核확장 상상초월할 것"(8/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비망록'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실지 행동으로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적대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그에 대처해 우리의 핵 무기고가 계속 확대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또 "우리의 강경입장을 무슨 전술로 보는 것은 오산"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그 무엇을 바꿔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해 핵을 보유한 것"이라고 강조함.

3. 대남정세

- **北, 민간단체 방북에 돌연 "그만두자"(8/28, 연합뉴스)**
 - 북한이 대북 수해지원 논의를 위한 남측 민간단체의 방북을 돌연 취소하거나 연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어린이어깨동무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9일 개성을 방문해 수해지원 문제와 기존 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이들 단체에 초청장까지 발급했던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은 방북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팩스를 보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는 "그만두자"며 접촉 취소를, 어린이어깨동무에는 접촉 연기를 각각 통보함.
- **北, 美한인회 대표에 방북 타진(8/28, 연합뉴스)**
 - 북한 유엔 대표부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 한인사회의 대표기구인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미주총연)에 방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미주총연의 유진철 회장은 28일 애틀랜타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열흘 전쯤 북한 대표부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밝힐 순 없지만 골자는 (미주총연의) 북한 방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함.
 - 유 회장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미주총연을 주축으로 한 세계한인회 회장단이 방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으며, 북측의 방북 제안에 유 회장은 "고민하겠지만 지금은 여러 사정상 어렵겠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말함.
 - 유 회장은 자신과 통화를 한 북측 인사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



만 미주총연 안팎에선 신선호 유엔 대표부 대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 北 김영남, 한미 군사훈련 강력 비난(8/31, 신화통신)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전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개막된 NAM 정상회의 석상에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곳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군사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의 가장자리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함.
- 그는 "미국은 근래 아시아 지역에 많은 최신 무기를 배치해 조선(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선은 전쟁을 저지할 전력을 갖추야 하고 그래야만 경제 건설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임.
- 그러고서 "조선은 한반도 통일에 힘쓰는 어떤 나라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고도 하며, "비동맹 국가 간에 단결하면 성공할 것이고 분열하면 실패로 이어진다는 건 이미 비동맹운동의 발전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엔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 놓음.

■ 기타 (대남)

- [北 교육위 대변인 담화(8.30)] 울산대 이노형교수 등 재판(보안법위반) 기소 관련 '신성한 교육에 대한 모독, 정치적 도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정의와 양심, 교육에 대한 탄압 중지 및 보안법 철폐' 주장(8.30, 중통·중방)
-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을 쓰게 한 것으로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

●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중·북 관계

● 北中공동관리 수풍댐 홍수방지시설 완공(8/29,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공유 하천인 압록강에 세워진 수풍발전소(수풍댐)의 홍수방지시설 공사가 최근 완료됨.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중국에서 열리는 수풍발전소 홍수방지시설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해 북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의 북한 측 이사장인 김용철 전력공업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이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함.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북중 양측은 압록강의 홍수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8월15일부터 수풍발전소의 댐과 수문에 대한 개조공사를 진행해왔음.
- 수풍발전소는 1944년 압록강에 세워진 수력발전소로, 북중 양측은 북중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해 매년 베이징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이사회를 개최해왔음. 양측은 과거 수풍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절반씩 나눠 사용해왔지만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는 생산된 전력 전량이 평양시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일·북 관계

● 北·日 내일 정부 간 대화...납치문제 초점(8/28,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4년 만에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함. 이번 북·일 대화는 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반환 협의를 위한 것이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피랍자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 북·일 대화는 베이징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29일 오후 3시부터 열림. 북한과 일본의 정부 간 협의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이며, 일본은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발족 이후 처음임. 양국은 애초 국장급 협의에 합의했으나 북한이 과장급으로 격을 낮추자고 요구해 일본이 수용함.
- 정부 간 협의에 앞서 양국 적십자 대표는 지난 9일과 10일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를 협의함. 따라서 이번 정부 간 대화의 의제도 유골 반환과 일본 유족의 묘 참배 문제 등이 중심이지만 일본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납북자 문제의 진전을 가장 희망하고 있음. 북한과 일본은 2008년 8월 열린 실무자협약에서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일본의 정권 교체를 이유로 북한이 재조사의 연기를 일본에 통보한 뒤 교섭이 끊김.
-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2009년 8월 실시된 총선 공약에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내걸었고, 정권 출범과 동시에 전담 각료인 납치문제담당상을



두고 문제 해결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대화 거부로 진전이 없었음. 북한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 합의로 5명의 납북자를 귀국시킨 것으로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납북자가 1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이 유골 반환 문제보다 납북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일본이 유골 문제와 납치 문제를 뒤섞어 회담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고 반발함. 일본은 이번 협의 후 국장급으로 대화의 격을 높여 북한과의 현안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임.

- 일본은 납북자와 유골 반환 문제 외에 핵·미사일 문제, 민간단체 등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약 470명에 달하는 '특정실종자' 문제, 1970년 3월 적군파에 의해 자행된 요도호 납치범 처리 문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이뤄졌던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건너간 일본인 처(약 1천800명) 문제 등의 협의도 기대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중의원 예산위원장(전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을 내세워 송일호 북일 교섭담당 대사와 물밑 대화를 시도했으며, 작년 9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 출범 이후 대화 재개 협의가 본격화됨.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과 송 대표는 올해 초까지 4차례 회동해 납북자 문제는 물론 유골 반환과 북송 일본인 처의 귀환, 국교 정상화 교섭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은 지난달 하순에서 이달 초순에 걸쳐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의 방북을 허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부를 만나도록 하는 등 대화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임. 일본은 북한과의 정부 간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독도 문제로 최악의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일본은 당초 미국, 한국과 공조해 핵·미사일 문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패키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6자 회담에 진전이 없는데다 미국이 식량을 매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한국과도 관계가 멀어지자 북한과의 독자 대화로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식량지원을 받는 한편 한미일의 대북 공조를 흔들려 할 것으로 예상됨.

● 북일 정부 간 협의, 납치문제 싸고 난항(8/30, 자유아시아방송)

- 북일 외무성 과장급 회담이 29일에 이어 30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서 열림. 북한 외무성의 류성일 일본 과장과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치 북동 아시아 과장은 30일 열린 회담에서 양국 외무성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본 회담의 의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함.
-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일 양국은 2차 대전 말기와 전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반환문제와 가족 성묘 문제, 재일동포 북송 사업에 따라 북한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 간 일본인 처의 귀국 문제, 1970년에 일어난 일본 항공기 요도호 납치 범 송환 문제 등을 국장급



회담의 의제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음.

-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과 "일본인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측 주장이 맞서 4년 만에 열린 북일 정부 간 협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함.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신 체제가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식량 원조 등을 우려내기 위해 이번 회담에 응했으나, 간단히 납치 재조사 문제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앞으로도 납치 재조사 문제를 미끼로 일본 측의 반응을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일본의 NHK 방송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일 과장급 회담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국장급 본 회담의 의제로 상정할 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이틀간으로 예정된 회담을 하루 더 연기해 31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 日, 17일 북한과 국장급 교섭 추진 (9/2, 연합뉴스)

- 북한과 정부 간 대화의 물꼬를 튼 일본이 고위급 교섭을 서두르고 있음.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외무성이 제반 현안 논의를 위한 북한과의 국장급 대화(본회담)를 오는 17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함. 이 신문에 의하면 국장급 교섭에 일본 대표로 나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일 남북 피해자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일본이 북일 평화선언 10주년인 이달 17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함. 이는 17일이나 그 이전 국장급 교섭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북한도 일본과의 조기 국장급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과장급 교섭에 북한 대표로 참석했던 유성일 외무성 일본과장은 1일 베이징공항에서 국장급 교섭과 관련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는 것으로 쌍방이 조정하고 있다"고 말함. 북한과 일본은 4년 만에 재개된 최근 정부 간 교섭에서 '향후 교섭의 수준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해, 이달 베이징에서 본회담을 열고, '향후 협의에서 쌍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을 의제로 광범위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함.

다. 러·북 관계

● "北, 러시아 APEC 회의 참가 요청"(8/29, 연합뉴스)

- 북한이 9월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겠다며 의장국 러시아에 참가를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함. 이 신문은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북한 당국자가 지난달 중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대표단을 파견하고 싶다는 뜻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전함.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닌 만큼 게스트 등의 자격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이럴 경우 공식 회의는 참석하기 어렵지만, 정상 회담과 함께 열리는 관련 행사 등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지적함. 북한이 자국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 러시아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안전보장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생각임.
- 러시아의 한 북한 전문가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구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실무관계를 강화할 의도로 북측 참가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신문은 전함. 러시아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8~9일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에서 개최됨.

라. 기 타

● 北김정은, 전방 시찰 마치고 평양 복귀(8/30, 연합뉴스)

- 최근 전방 군부대를 잇달아 시찰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동부전선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 장군님의 동상을 찾으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보도함. 북한 매체가 최고지도자의 지방 산업현장 및 군부대 시찰 후 평양 귀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끄.
- 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헌화했으며 현지에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맞이함.
- 북한은 지난 24일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날(8월25일)을 맞아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짐. 김 제1위원장은 동상 앞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대원수님들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정중하면서도 친근하게 형상했다"고 평가하고 동상 건설에 이바지한 만수대 창작사 간부와 창작가, 군 제583부대 군인건설자들, 종업원들, 지원자들에게 '감사'를 전달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7일 연평도 인근의 장재도·무도 방어대를 방문했으며 동부전선에서 여성 해안포중대인 '감나무 중대'(24일·이하 보도날짜 기준), 제313대연합부대 지휘부(28일), 제318부대(29일)를 잇따라 시찰함.

● "北주민들, 북한돈 거래 꺼려해...물물교환 성행"(9/1, 조선일보)

- 북한 당국이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보임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불안감을 표출, 장마당에서 북한 돈 받기를 거리고 물물교환으로 생필품을 구해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짐.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세계 경제 관리 체계 시행과 관련한 경제일꾼 실무 강습이 진행되면서 환율이 종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며 "장마당 장사꾼들은 '8.3(북한 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패쪽(팻말)을 내 걸고 있다"고 밝힘. 이 소식통은 "장사꾼 사이에선 중국 런민비(人民幣)는 '민폐', 북한 돈은 '8.3'으로 불림. 따라서 장마당에서 '8.3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북한 돈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함.
- RFA에 따르면 '8.3'은 본래 "생산을 하고 남은 자투리를 활용해 인민소비품을 만들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84년 8월 3일 방침을 의미하는 말임. 북한 주민들은 '8.3 제품'이라는 말을 '질이 낮은 제품'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음.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중국 런민비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식량이나 다른 필수품들로 물물 교환하는 실정"이라며 "강냉이 1kg이면 25도짜리 술 두병과 맞바꿀 수 있으며, 라선시에서 생산된 운동화 한 켤레면 입쌀 1kg을 바꿀 수 있다"고 전함.

●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야" 북한-이란 협정(9/2, MBN)

- 이란 국영 TV는 어제(1일) 테헤란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정은 학생 교환 프로그램과 에너지·환경·농업·식량 분야 공동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됨. 또, 미국에 맞서 양국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함.
- 이 자리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김영남 위원장에게 "북한과 이란의 강성을 원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은 두 나라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함. 이에 김 위원장도 "이란이 서방의 음모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고,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김 위원장은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만나 미국 등 서방 국가가 '공동의 적'이라는 데 대해 공감함. 이들은 "양국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협과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서방 등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서로 밀접하게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아시아 순방 클린턴, 독도 갈등 韓-日 제외(8/30, 동아일보)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열리는 쿡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와 중국 동티모르 브루나이 러시아 등 6개국을 방문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8, 9일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함. 클린턴 장관의 잇따른 아시아 순방은 미국이 태평양 회귀를 선언한 후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집중 논의해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함.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29일 "클린턴 장관의 PIF 참석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함.

- 클린턴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은 들리지 않음. 놀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해당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 한국 및 중국과 공동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해 왔다"고 말함.
- 중국 내에서는 클린턴 장관이 다음 달 4, 5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왕치산, 韓삼성 대표 회견…"개방 더욱 확대할 것"(8/29, 인민일보)

-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는 28일 중난하이(中南海)에서 권오현 한국 삼성전자 대표를 회견함.
- 왕치산 부총리는 올해는 중한 수교 20주년으로 중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파트너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중일한 투자보호협정이 정식 체결되었으며, 중한 FTA의 정부 간 협상도 가동되어 중한 양국의 무역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양측 기업협력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고 말함. 양측은 전자, 통신, 자동차제조, 신에너지, 바이오과학기술,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 상호 윈윈전략을 실현하고,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개혁, 개방을 통해 외자기업의 중국 내 경영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권오현 대표는 삼성전자의 중국 내 사업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중투자와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힘.

● 韓 니어재단-中 칭화대 안보전략 대화(9/1, 연합뉴스)

- 한국의 니어재단과 중국의 칭화(淸華)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3차 한중 안보전략 대화가 1일 베이징(北京) 소재 칭화대에서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참석함. 중국 측에서 팡전창 전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소장(현직장성), 양시위 외교부 국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웨이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 가오주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왕원 환구시보 편집장, 주수룽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 부소장이 나옴.
- 이번 전략대화는 민간이 주축이지만 한국의 현직 외교부 고위관리와 중



국의 인민해방군 장성이 참석해 '1.5 트랙' 논의가 이뤄짐.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의 변화와 현황', '한중관계의 미래와 협력'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 순서로 견해가 오갔음.

- 한중 안보전략대화는 지난해 5월과 10월 각각 베이징과 서울에서 열린 바 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오늘 일에 'ICJ거부' 독도구술서 전달(8/30, 연합뉴스)

- 정부가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지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오늘 중으로 일본 측에 구술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구술서에는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이 단호하면서 간결하게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정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제안을 일축할 것으로 알려짐. 구술서는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측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전달할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구술서 전달 사실과 독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를 재천명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함. 일본 언론은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어 정부의 반박 구술서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이 한일 외교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됨.

● 오자와 "총리 되면 독도 포기" MB에 밝혔었다(8/30, 동아일보N)

- 일본의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민주당 대표가 2009년 12월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조건부 독도 영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확인됨.
- 29일 면담에 참여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집권 민주당의 간사장이었던 오자와 전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한을 달래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독도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함. 오자와 전 대표는 독도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총리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밝힘. 그는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어업과 관련돼 있다"며 독도 영유권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시마네(島根) 현 어민들의 독도 주변 해역 어획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 비공식적 의견 개진 형식이지만 일본의 주요 정치인이 독도 영유권 포



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 FTA"(8/30, 연합뉴스)

- 밀실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일본의 핵심 군사 특허를 보호하면서 한국의 군사협력을 받아내려는 일본의 노림수가 깔렸다는 주장이 제기됨.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계간 '황해문화' 가을호에 기고한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확대전략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 번째 한반도 정벌을 위한 서곡'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분석함. 김 편집장은 "단순히 북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고도 각서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 협정은 '군사에서의 FTA(자유무역협정)'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비판함. 또 "일본의 군사위성과 이시스 구축함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피력하는 동안 이에 고무된 일본은 북한 폭격을 가정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이는 임진왜란 이래 일본이 구상하는 세 번째 한반도 정벌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 협정을 추진한 인사들에 대해서도 '현대판 친일세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김 편집장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리에 협정을 추진했으리라는 세간의 해석과 달리 그 반대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일체 생략된 채 군사작전 식으로 협정 체결을 해치우는 저돌적 양상까지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이는 구한말 정권과 거의 다를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 위안부 문제 일 년전부터 한국 법정에서 이미 시작돼 (9/1, 아사히신문)

- 한국정부는 회감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실제적인 '액션 플랜'을 요구해왔으며 심지어 분쟁지역의 한가운데인 독도에 대통령을 방문하게끔 만들었음. 이 모든 조치들이 "위안부 여성" 문제의 해결을 일본으로 하여금 촉구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임.

● 70대 日노인 "독도는 한국 땅 맞다" 한국영사관에 서한(9/2, 동아일보)

- "(일본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한국과 영원한 신뢰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국익에 맞는다." 70대 일본인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서한을 한국영사관에 보내와 눈길을 끌고 있음.
- 2일 주 센다이(仙台)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일본 미야기(宮城)현에 사는 일본인 남성 세이노 다쿠야 씨(77·가명)는 이 같은 내용의 A4 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왔음. 세이노 씨는 이 서한을 일본 언론사에 보냈지만 독자투고란 등에 반영되지 않자 "한국 언론에 전해달라"며 주 센다이 한국 총영사관으로 다시 보냄.



- 세이노 씨는 서한에서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국제사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주장을 견강부회(牽強附會·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함)라고 비판함. 그는 이 편지에서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를 편입한 것이나 한국전쟁 외중에 한국이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그는 또 "일본이 부끄러움을 모른 채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한 마리(북방영토)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이노 씨는 자신을 '일본을 사랑하는 평범한 일본인'이라고 소개함. 회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세이노 씨는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음. 치료를 하는 틈틈이 지역 향토사연구회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가타노 쓰기오(片野次雄)나 아라이 신이치(荒井信一) 같은 일본인 역사평론가의 책을 읽으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함. "제 주변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제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부나 언론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진 나라에서 죽기는 싫다. 제대로 된 나라로 돌려놓고 싶다는 생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라고 말함. 세이노 씨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진짜 애국심'을 전해주고 싶다고 강조함.

● <한일갈등에도 대북공조는 '정상'>(9/2, 연합뉴스)

-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대북 공조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짐. 한·일 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사흘간의 북일 정부간 회담이 끝난 지난달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북수의 정부 소식통들이 전함.
- 6자회담 일본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달 31일 우리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북일 회담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함.
- 북일 양측은 4년 만에 첫 정부간 회담을 지난달 29~31일 베이징에서 열었음. 일본 언론은 북일 평화선언 10주년인 오는 17일에 북일 양측이 국장급 본회담을 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한 상태임. 스기야마 국장은 북일 과장급 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계획 등을 사전에 설명함. 이를 두고 일본이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을 빚은 것과는 별개로 대북 문제에서는 우리 정부와 공조를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스기야마 국장은 독도, 과거사 문제 등을 외무성에서 실무적으로 다루는 역할도 하고 있는 인물임. 우리 정부도 독도 및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대북 공조를 비롯한 한일 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정례브리핑에



서 "한일 간에 북한 관련 사항을 둘러싸고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함.

- 한일 간 대북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북일 간 본회담 시작을 전후한 시점에 임성남 본부장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지난달 말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한일 고위급(차관-대사급) 외교채널이 가동된 것은 임 본부장의 방일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부 당국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함.

라. 미·중 관계

● "中, 美 아시아 MD 확대에 우려"(8/27,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확대하고 나서겠다고 하자 중국이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미국이 조기 경보 레이더 시스템인 X밴드를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새로 배치하려는 노력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됐던 미국의 군사, 안보 관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도함.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잠잠한 편이지만 주펑(朱鋒)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미국의 발표는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 같다"고 논평함.
-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MD의 아시아 구축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하고 "그것은 (중국) 저지처럼 보인다"고 털어놓았음. 빅토리아 놀랜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MD 배치계획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X밴드 배치를 놓고 워싱턴과 도쿄 당국이 많은 논의를 했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히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전략은 이미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방어해야 한다는 거센 압력에 직면해 있는 중국 지도자들의 반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분석함. 호주 국방 아카데미의 아시아 분석 전문가인 칼 테이어는 "중국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가 미국의 냉전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목적은 중국을 저지하는데 있다는 관점을 강조할 것이다"고 내다봄.
-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이번 MD계획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3일 경고 메시지는 보냄. "중국은 요격미사일 문제가 국제적인 전략 안정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메시지임. 중국은 아. 태지역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새 미사일들을 개발 중임. 중국은 미국의 MD를



화력에서 압도하기 위해 더욱 위력적인 미사일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지도 모른다는 분석들이 있음.

-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X밴드가 유도하는 요격미사일은 보다 제한된 공격만을 격퇴해 미군 기지와 군함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대규모 공격에는 압도당한다고 말함. 이들은 "상대국의 계산을 변화시키기 위해 100% 효과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함. 미 국방부는 MD에 대한 결정을 촉발한 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2015~2016년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 국방부의 일부 관리들은 X밴드 레이더가 필리핀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함.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 중국 일부 지방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의 궤도를 정확히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임. 미국의 MD 아시아 확대 계획은 영유권 분쟁과 자원경쟁, 민족주의 점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안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분석들도 있음.

● <中, 美 클린턴 아태 순방에 '떨떠름'>(8/29, 연합뉴스)

- 중국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태평양 순방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음. 클린턴 장관의 열흘 일정과 동선을 고려할 때 중국을 압박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판단에서임. 남중국해 분쟁을 염두에 두고서 중국 견제에 동참할 국가들을 방문지로 선택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남태평양 세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게 중국 측 시각임.
- 29일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클린턴 장관의 쿡 아일랜드 태평양 도서국포럼(PIF) 참석이 이례적이라고 꼬집었음. 그러면서 PIF에 참석하는 미국의 역대 최고위층 인사인 클린턴 장관의 목적은 오로지 중국 견제에 있다고 함. 최근 몇 년 새 중국이 통가, 나우루, 사모아, 파푸아 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자 이에 경각심을 느낀 미국이 클린턴의 PIF 참석을 결정했다는 주장임. 중국은 아울러 클린턴 장관이 다음 달 4~5일 중국 방문 전후로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방문하는 것에도 경계심을 숨기지 않음. 미국과 해당 국가 간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 견제 해법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에서임.
-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립'을 지켜온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가 반(反) 중국 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색도 역력함. 중국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중국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음. 이달 초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중국은 인도네시아를 우군으로 만들려고 공을 들여왔음.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지렛대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추진 중인 남중국해 '행동수칙(Code of conduct)' 제정을 차단



하려 하지만 미국은 그와는 반대 입장임.

-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이번 아태 순방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함. 클린턴 장관은 지난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의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아세안 각국과 접촉하면서 남중국해 행동수칙 제정을 성사시키려 노력했었음.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클린턴 장관의 방중 기간에 미중 간에 남중국해 갈등은 불가피해 보임.
- 남중국해와는 별도로 동중국해 문제도 도마 위로 오를 것으로 관측됨. 차이나데일리도 클린턴 방중 때 닌둥(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개입'을 강력하게 성토했는 중국 내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함. 중국의 주장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중국 땅인 닌둥(釣魚島)을 돌려주지 않고 일본에 넘겨 작금의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분쟁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요약됨.
- 클린턴 장관은 30일 워싱턴을 출발해 쿡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동티모르, 브루나이,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이런 가운데 중국의 우정룡(吳正龍) 전 크로아티아 대사는 관영 신화통신에 "중국과 주변국 간에 이간질하고 주변국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게 미국의 외교술"이라는 비판 글을 실어 관심을 샀음.

● 中외교부 립니에 "근거 없는 비난 중단하라"(9/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밋 립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근거 없는 중국 비난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홍 대변인은 근래 립니 후보의 대(對) 중국 발언에 주목한다면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며 미중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그는 미 정치인들이 근거 없는 비난과 내정 간섭을 멈춰야 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관계 증진에 노력하라고 주문함.
-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도 립니 후보에게 '중국 때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섬. 신화통신은 지난 29일 평론을 통해 립니 후보가 지난 수개월 여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비난했는가 하면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군사력 강화를 주장해왔다면 "이제 그런 계입을 중단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씀. 차이나데일리로 같은 날 립니 후보를 겨냥해 "냉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비난함.
- 립니 후보는 선거공약을 통해 "중국이 지역적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함. 그는 공화당 전당대회 행사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에 1조 달러의 빚을 지기를 원하느냐"며 참석자들의 반발을 유도하는 등 반중 정서를 드러냄.



마. 미·일 관계

● 미국 "한·일에 외교 갈등 자제 촉구"(8/31, SBS)

- 미국 정부가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자제를 촉구함.
-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31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순방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최근 한·일간의 긴장 사태는 미국의 우려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특히, 미국은 다시한번 두 나라에 자제와 침착,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이 당국자는 이어 동중국해 다투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도 미국은 그동안 두 나라에 이견에 집중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말함.

바. 미·러 관계

● 러시아, 서방 對시리아 일방제재 거듭 비판(8/31, 연합뉴스)

- 러시아가 서방의 일방적 대(對) 시리아 제재를 거듭 비판하고 나섬.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일부(서방) 국가들과 지역 기구들이 시리아에 가한 일방적 제재가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제재들은 시리아 위기 사태 해결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고 지적함.
- 추르킨 대사는 "이 제재들은 시리아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그들이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누릴 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리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들이 조속히 이를 해제할 것을 촉구함.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계없이 시리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와 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아랍국가연맹(AL) 등임.
- 미국은 시리아 고위 관리들의 계좌를 동결했고, EU는 시리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했으며, AL은 시리아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동결하고 회원국들에 시리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도 시리아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앞서 29일 시리아 재무장관 모하메드 알 즐레이라티는 서방의 제재로 시리아가 약 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지만 국가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사. 중·일 관계

● 日방위성, 中 겨냥 상륙돌격장갑차 도입 추진(8/27,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최근 중국과 영토 갈등이 고조된 것을 기회로 상륙돌격장갑차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27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 요구안에 4대의 상륙돌격장갑차 조달 경비 약 30억 엔(430억 원)을 포함할 방침임.

- 주된 검토 대상은 미군의 AAV7 상륙돌격장갑차로,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에 본부를 둔 육상자위대 서남 방면 보통과 연대에 배치할 예정임. 상륙돌격장갑차를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포함한 난세이(南西) 제도 방위에 이용하려는 의도인 셈임. 상륙돌격장갑차는 부대를 강습상륙함에서 해변으로 전개할 때 이용하는 장비로, 일본 방위성은 그동안 탄도미사일, 항공모함 등과 함께 상륙돌격장갑차를 평화헌법이 금지한 '공격용 무기'로 해석해 도입하지 않음.
- 하지만 방위성 간부는 "자위대의 목적은 전수(專守)방위인 만큼 (상륙돌격장갑차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겨왔지만, 일단 빼앗긴 섬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상륙돌격장갑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함.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상륙돌격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을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한국, 중국의 공세를 역이용해 장비를 확충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함.

● 中 '중영유권 침해 발언한 日'에 강력한 불만 표해(8/27, 인민일보)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일본 정상의 댜오위다오(釣魚島) 관련 발언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함.
- 8월 24일, 일본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댜오위다오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1895년 메이지 정부가 이곳에 청나라 통치 흔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고,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1970년대 동해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주권을 주장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떻게 답변하겠는가? 라고 질문함.
- 이에 홍레이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정상이 중국 영토 주권을 공개적으로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라고 밝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 및 도서지역이 오래 전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였고 처음 중국인에 의해 발견되어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함. 또한 댜오위다오의 현존하는 최초 역사 기록 중 하나인 명나라 영락(永樂) 원년(1403년) <순풍상송(順風相送)>에서 사용한 명칭은 댜오위위(釣魚嶼)와 츠칸위(赤坎嶼)으로 오늘날의 댜오위다오, 츠칸위를 뜻하고 명나라 저장(浙江) 제독(提督)인 후종헌(胡宗憲)이 편찬한 <주해도편(籌海圖編)>에 명나라 관할 도서지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중 댜오위다오 도서도 포함되어 이 도서지역은 적어도 명대에 중국해역 관할 범위에 있었음. 일본은 오히려 1895년 갑오전쟁 기간에 댜오위다오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 도서지역을 갈취했기 때문에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힘.
-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은 중국의 동북, 타이완(臺灣), 평후(澎湖) 열도 등의 침탈 영토를 중국에 반환함. '포츠담 선언' 또한 '카이로 선언의 조



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1945년 8월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며 이는 일본이 타이완 및 다오위다오 등 도서지역을 중국에 반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1951년 9월 18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해 정중하게 성명을 내고, 샌프란시스코 대일 조약이 중국의 준비, 제정 및 체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불법 및 무효라고 주장한바 절대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1971년 6월, 일본과 미국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체결하고 다오위다오 등 도서지역을 '반환 지역'으로 정하여 중국 영토를 거래한 행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971년 12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이는 완전한 불법이며 거듭 다오위다오 및 도서지역이 중국 영토이며 분리되지 않는 일부분이라고 밝힘.

● 중국, 한국 제치고 일본 방문 1위... 134.4% 증가(8/31, 세계여행신문)

- 일본 인바운드 시장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7월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총 84만5300여명으로 56만1489명이었던 지난해 7월보다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7월 87만8582명이 입국한 기록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일본 방문자 수는 예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한국인들의 일본 방문 비중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한국은 7월에 18만9700명이 일본을 방문,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35.4% 증가했지만, 2010년 7월 23만6092명이 일본을 방문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수치를 나타냄. 반면 중국은 2010년 7월 16만 4944명이 일본을 입국한 것에 비해 올해 7월에는 20만3800명이 입국하며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지난해 7월보다 무려 134.4% 증가한 인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아. 중·러 관계

● 리커창, 중러 대학생 연수활동 참가자 회견(8/27, CCTV)

-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24일 인민대회당에서 중러 청년대학생 연수활동에 참가한 교사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짐. 리 부총리는 지난 4월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중국정부를 대표해 모스크바대학교 300명 학생이 여름 방학기간에 중국에 와 연수할 것을 요청함.
- 이번에 온 모스크바대학교 학생들은 중국에서 중국 대학생들과 다양한 교류행사를 벌임. 간담회에서 사도브니치 모스크바대학교 총장은 이는 중러 간의 장기적인 친선의 연장이자 승화이며, 또 모스크바대학교 역사에서의 '최고의 영광'이라면서 "앞으로 매년 중국대학생 100명을 요청해 모스크바대학의 청년혁신포럼에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 리 부총리는 "중국과 러시아는 세세대대 이웃으로 지내왔으며 특히'중러 선린친선협력조약'을 체결한 후, 양국관계는 쾌속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이 있



는 국가로 양국 관계의 화목한 발전은 양국민민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말함. 이어서 리 부총리는 세계 평화란 신념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혁신적인 발전 이념으로, 개방적이고도 포용하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나서 양국 청년들이 문명을 전승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세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자. 일·러 관계

● 러 외무 "영토문제 日 반발로 진전 없어"(8/27,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쿠릴열도와 관련한 양국 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일본의 반발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힘.
- 27일 NHK방송에 의하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달 열린 일본과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쿠릴열도 문제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방문에 대한 일본의 반발이 원인이었다고 말함.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남부의 소치에서 회담함.
- 당시 겐바 외무상은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방문에 대해 "일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반발함. 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솔직히 말해 일본의 반응은 러시아 국민의 자긍심과 감정을 상하게 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루(일본 이름 에토로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 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러시아와 일본은 10월에 일본에서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차관급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러시아가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쿠릴 남부 2개 섬의 일본 인도를 언급했던 1956년의 일·소련 공동선언을 디딤돌로 쿠릴열도 반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음.

차. 기 타

● 미국, 아세안과 무기 공동생산 등 확대 제안 (9/1, 뉴스타운)

- 미국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ASEAN)과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측에 무기의 일부 공동 생산을 포함한 미국산 무기의 조달 확대를 제안했던 사실이 31일 밝혀졌다고 교토통신이 31일 보도함.
- 필리핀 등 아세안의 일부 회원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아세안은 최근에 잠수함과 전투기를 중심으로 무기 조달을 급증시



키고 있음.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의 무기 거래에서의 연계 강화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아세안이 미국산 장비 부품 및 시스템의 일부를 수주하고 완성품을 조달하는 '오프셋 거래'가 주축이 될 것으로 관측됨.

- 이 같은 미국의 제안은 아세안 측에도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며, 무기 조달 비용의 경감이라는 장점도 있음. '오프셋 거래'에는 미국 측의 공업제품 수입 및 투자 등의 조건으로 아세안이 미국산 무기를 조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짐. 경기 후퇴로 유럽과 미국의 무기수요가 감퇴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의 판매 노선 확대를 노리는 미국 무기산업의 뜻을 반영하고 있어, 미국 통상관련 소식통은 "건실한 경제 성장이 계속 되는 시장은 매력적이다. 효과적인 합의에 발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함.
- 미국과 아세안 양측은 이전 가능한 기술 및 거래 대상이 될 장비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 거래에 필요한 절차 및 법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은 국방부, 국무부, 산업계 대 표를 포함한 정기적인 협의 장소를 설치할 것도 제안해 지속적으로 포괄 적인 합의를 해 나갈 것으로 전해짐.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